

개원식·교섭단체 대표연설 무산... 국회 정상화 '깜깜'

野 주도 순직해병 특검법안 처리에 與 개원식 불참 선언... 무기한 연기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 관측 尹,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커

여야가 합의했던 7월 임시국회 일정이 '순직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로 파행되면서, 22대 국회는 개원식도 열지 못하는 '막장 국회'란 오명을 쓰게 됐다.

여야는 지난 5일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오전 10시에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했으나, 전날(4일) 야당 주도로 시작 24시간이 경과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특검법안을 처리하면서 여당은 개원식 불참을 선언

했다. 관례상 국회 개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향후 국정 방향 등을 밝히는 연설도 진행하지만 개원식 취소 및 무기한 연기로 이 또한 볼 수 없게 됐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8~9일로 기존에 합의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하지 않기로 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파행됐고, 이틀차인 경제분야와 삼일차인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특검법안 처리와 관련한 반발로 실시조차 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87년 개헌 이후 지각 개원식 기록은 21대 국회 출범 후 48일

만에 개원식이 열린 7월 16일이었는데, 현재의 여야의 대치 강도 볼 때 이를 넘어서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6월 임시 국회 종료 전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4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을 설득해 반쪽이라도 국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장실은 여야가 불참한 개원식은 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여야 대치는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정국은 본회의 문턱을 넘은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

난 5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특검법안을 접수했고 15일 이내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야당은 순직해병 사건의 1주기가 오는 19일 돌아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야당안을 그 전에 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재통과되자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며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의 검사 4인 탄핵 추진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등 여야 대치 전선이 넓어지는 것도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와 야당 주도 표결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면서 오늘 예정되었던 개원식도 연기됐다. /뉴시스

與 전당대회, '김건희 문자 무시' 논란에 점입가경

韓 대세론에 맞서기 위한 계파갈등 해당 이슈 두고 당심 선택 '주목' 진흥당 싸움에 당 분열 우려 제기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중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인한 진실공방이 계속되면서, 계파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대세론이 강했지만 최근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김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한 당심의 선택이 주목된다.

7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김 여사 문자 논란과 관련,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원의 인사들이 연판장을 작성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반면 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당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 문자 논란이 전당대회 중심 이슈로 떠오른 건 '명품백 수수 의혹'이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왼쪽부터),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 당 대표 후보들이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4·10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평가 때문이다. 한 후보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김 여사의 사과를 막았고, 이것이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는 게 다른 당권주자의 주요 공격 지점이다.

또 이를 근거로 한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한동훈 대표 선출 시 당정관계 악화 우려'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9일부터 다섯 차례 열리는 후보 방송토론회에서도 김 여사 문자 논란을 들어 한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전망이다. 대표 선출 때 당원투표 80%가 반영되는 만큼, 당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후보는 김 여사 문자 논란이 몇개월 지나 불거진 것은 '한동훈 대세론'을 견제하기 위함이며, '당무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여사의 문자 내용은 사과가 어렵다는 취지였으며, 본인은 사과를 요구하다가 대통령실에게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전날(6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이 이슈 자체는 누가 보

더라도 저를 막기 위한 어떤 시도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며 "이런 식의 전당대회 개입이나 당무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에 대해 진윤(진윤석열)계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과 만나 "김 여사 문자 논란을 보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당무개입으로(대통령실) 끌어들이는 것인지, 이럴 때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며 "자기의 답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행동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 문자 논란은 '한동훈 대세론'에 맞서기 위한 계파 갈등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후보와 대통령실과의 관계뿐 아니라, 한 후보에게 총선 패배의 책임까지 씌울 수 있는 이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심이 해당 이슈를 두고 한 후보를 선택할 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심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한 후보에게 물으면 '한동훈 대세론'은 흔들릴 것이지만, 대통령실과 각을 세워야 한다고 여기면 한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후보의 약점으로 꼽혔던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 패배 이후 '수직적 당정관계'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한 후보가 용산과의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전당대회 양상이 계속 타 주자의 한 후보 공격, 그리고 한 후보의 반격으로 이어져 혼탁해진다 지적도 있다. 총선 패배 이후 여당의 혁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갈수록 진흥당 싸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러다가 당이 쪼개질 거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

"공영방송에 정권 영향력 강화" vs "절차 따른 수순일 뿐"

尹,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사진)을 지명한 것을 두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MBC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절차'라는 주장이 팽팽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YTN 민영화 등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을 발의해 2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이진숙 전 사장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언론계와 야당은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국가가 뭐라 하는 방송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

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전 사장에 대해 이라크 전 당시 최초의 여성 중군기자로 활약하고 경영인으로서의 능력도 인정받았다고 치켜세운 반면, 야당과 언론계는 MBC 재직 중 'MBC 민영화·노조 탄압 의혹'·'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책임'이 있다는 박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 전 사장 지명을 두고 일각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7일 <메트로경

제신문>과의 통화에서 "MBC 이사진 교체와 그다음 사장 교체는 정권 입장에서 방통위에 대한 당면 과제"라고 했다.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 전 사장이 방통위원장직 후보를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김민하 평론가는 '벌떼야구'를 언급했다. 투수(방통위원장)들이 타자(야당) 한 명씩 상대하고 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반면 신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은 절차에 따른 수순일 뿐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이 전 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지금 MBC 방문진 이사진이 8월 중순(8월 12일)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러면 방

문진 이사진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을 경우, 5~6개월은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MBC 운영에 차질이 생겼을 거라는 뜻이다.

또 민주당이 이 전 사장을 '탄핵 대상'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신 교수는 "(이 전 사장이) 위원장으로 취임하지 않았는데 '법법을 할 것이다'라고 예단하고 탄핵한다는 것이 논리에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정상적인 직무를 계속 막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현 수습기자 yunbgb0611@